

언론중재권 강화와 언론의 자유

이정윤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중재위원

언론의 잘못으로 인한 오보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역할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 속에 점차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금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기세미나에 참가한 발표자와 토론 참가자 모두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여함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미국 대통령 제퍼슨의 말이 아니라도 우리의 생활에서 이미 언론 없는 생활은 상상해 보기조차 힘든 일이다.

오늘 우리 사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만 해도 만약 언론이 없었다면 그 같은 비리의 폭로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언론 없는 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반면에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현실적 과제임이 사실이다.

금년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과 언론피해구제」를 세미나의 주제로 정하여 토론의 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문제가 이미 절박한 사회문제임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이다.

어떤 이유들로 언론피해가 생기는가 살펴보면 언론매체간의 경쟁으로 속보에 치중하다가 충분한 취재를 못한 때문에 생기는 오보가 있는가 하면 언론인의 전문지식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오보도 있고 또 취재원의 정보조작에 의해 생기는 오보도 있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듯 오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보 중에는 신문잡지의 경우, 활자의 오식으로 생기는 오보-대(大)통령을 건(犬)통령으로 잘못 인쇄한 경우-라든가, 일부만 보도함으로써 전체내용을 오인케 하는 데서 오는 오보가 있는가 하면, 기자가 의도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보도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대한 오보라 할 것이다.

「법과 언론피해구제」 세미나에 중견 언론인이 대거 참석, 열띤 논의를 벌인 것도 근래에 와서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피해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관심도가 높아진 것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할 것이다.

발표된 논문 속에 언론피해 즉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에 기사를 사전심의하는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 설치 제의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게 된다. 주요기사의 사전심의만이라도 확실히 시행된다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은 사전에 미리 제거됨으로써 잘못된 보도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언론중재위에서 중재가 성립된 경우 오보를 정정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는 자유언론의 신장과 책임 언론의 조화로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재가 언제나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의 자세가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론을 실어 줄 것은 실어주는 데에 정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언론의 사명 중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봉사가 큰 비중을 갖는 것이라면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경우 솔직하게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정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봉사정신에 합당할 것이며 또한 언론매체 그 자체의 공신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 언론이 독재적인 정치하에서 자유언론 쟁취를 위해 투쟁할 때 많은 국민이 성원을 했고 그로 인해 획득한 공신력도 국민 지지의 바탕 위에서 얻어진 것일진대,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정정보도와 반론기사의 게재에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국민봉사정신에 합당한 일일 것이다.

다만 일선 취재기자들이 속보에 매달려 경쟁에 치중하다가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하여 발생한 오보의 경우, 언론사 내에서 기자 개인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지만 말고 전체 회사의 입장에서 잘못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 기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으로서 중재위원회가 언론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귀찮고 성가신 기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론과 언론사의 신뢰도를 높여주어 언론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기구임을 인식, 좀더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언론 자유가 없는 사회란 질식되고 찌든, 인권이 억압된 사회로서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언론의 남용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케 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유사회라 할 것이며 발전이 약속된 사회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만 물질문명의 발달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사회도 빠른 발전과 함께 언론 매체의 다종 다양화 추세는 날로 더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로 인함인지 개인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보도가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81년 언론중재위가 설립된 이후 작년도인 1994년 말까지 14년간 중재신청건수가 총 2,274건으로 설립 첫해인 1981년 44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1994년에 541건, 금년만 해도 10월말까지 이미 460건,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멈출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언론중재위가 갖는 책임이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으며 좀 더 효율적인 힘을 발휘하여 오보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토록 현행 중재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언론피해구제 세미나에 각계 전문인사들을 계속 초청, 많은 좋은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러 현행 언론중재위의 운용 경험을 합쳐 나간다면 현행 중재제도의 이점을 더욱 발전 강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중재위원으로서 현행 중재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운용하기 위해서 현재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의 역할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완되고 강화된다면 중재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언론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